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 개념으로 노동문화 바라보기

김 태 황*

I. 임노동관계의 특이성

임노동관계는 일반 상품거래 관계에 비해 훨씬 복잡적이고 민감한 관심사이다. 사람에게 내재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계약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교환의 대상인 노동력과 개인의 고유한 인격은 전혀 별개이지만 임노동관계에서는 때때로 구분되지 않고 일체로 간주되어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하위직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언어표현이나 정규 노동과정과 무관한 작업 지시 또는 역으로 상위직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도덕적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들이 당연시되기도 한다. 노동력이 인격체인 사람과 분리되어 교환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다. 임노동계약을 아무리 치밀하게 체결한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조건과 대가를 명시할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력의 질을, 피용자는 노동강도를 실제로 알기 이전에 서로가 먼저 노동대가를 계약한다. 투입된 노동력은 교환되거나 환원될 수가 없다. 말하자면, 임노동관계는 상품과는 다른 교환 특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사회적 마찰과 갈등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원시사회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노동의 분업화는 노동관계와 노동방식뿐만 아니라 노동의식이나 노동문화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쳐왔다. 한편으로는 노동의 개인주의화가 확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의 사회화가 증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동의 분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근로자 개인은 어떻게 더욱 자율화되는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가? 어떻게 노동문화가 개인주의화와 사회적 연대화의 모순된 관계에서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는가? 이는 사실 사회학자 뒤르켄(Durkheim)이 근본적으로 제기했던 문제 의식이었다.

*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ecothk@mju.ac.kr).

II. 뒤르켐의 사회적 연대론

뒤르켐의 사회적 연대론은 노동계약의 개인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사회조직의 공동 기반에서 노동의 사회적 분업을 재정립하려는 탐구였다. 사회적 연대는 사회구성 요소들의 유사성과 노동의 분업화에 따라 역사적으로 상이한 유형을 나타낸다. ‘기계적 연대(la solidarité mécanique)’는 ‘억압적 규약(les règles répressives)’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유기적 연대(la solidarité organique)’는 ‘협력적 규약(les règles coopératives)’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기계적 유대’는 균일한 의식을 갖는 개인들이 사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사물이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이 개인이 사회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개인적 의식이 사회의 집단성에 통합되는 사회적 연대 형태이다. ‘기계적’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기계적 도구를 통해서라든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력이 없는 무기체(無機體)의 구성요소들이 결합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억압 제도에 의해 개인은 집단적 존재로서만 그 독자성을 유지할 뿐이며 독립적인 운동을 펼치기란 불가능하다.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의 종교의식, 사회 규율이나 관행들은 개인들을 일방적으로 사회(집단)에 복속시키는 기능을 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국방의무나 납세의무의 기본 정신은 이러한 기계적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노동의 분업화가 진전되면서 기계적 유대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동방식과 노동문화가 갈등 요소들을 최소화하며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유기적 연대’는 구성원들이 동일한 집단 내에서 상이하고 전문화된 개별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이행해 나아갈 때의 사회적 연대 형태이다. 마치 유기체(有機體)의 운동처럼 개별 단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능이 커질수록 집단적 연대도 강화되는 점에 주목한다. 고등동물의 세포 분열이 활발해지고 각 기관의 자율적인 기능이 왕성해질수록 상호 의존성이 강해지고 마침내 유기체 전체가 성장하게 되는 현상과 동일하다. 사회적 노동 분업의 결과로 노동력에 대한 평가가 더욱 개별화된다 하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개별 노동력간 상호 협력적인 제도(협력적 규약)도 강화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충되거나 발산되기 쉬운 개인 활동들을 구심력으로 이끌 수 있는 사회적 규율과 제도가 필요하다. 사유재산제도가 대표적이다. 계약제도나 행정적·정치적 기능들도 유기적 연대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의 분업화에 따라 유기적 연대가 기계적 연대를 대체해 왔지만 사회적 관계의 원심력 경향(centrifugal)과 구심력 경향(centripetal)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

라 그 효력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세포 분열이 활발한 것이 암세포에 의한 것이라면 그 기관은 물론 조직체 전체의 건강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의식이 강한 원심력과 집단주의적 공동체 의식이 강한 구심력이 균형 있는 조합을 이루는 것이 관건이다. 공동체 의식과 개인 의식 간 범위와 영향력에 따라 조합이 달라진다. 자연발생적인 개인 의식과는 달리 공동체 의식이 결정되는 수준, 사회적 관계들의 지속성과 안정성 등에 따라서도 유기적 연대가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원심력 경향), 오히려 연대감이 약화될 것인지(구심력 경향)가 결정된다.

사회적 연대 개념은 노동관계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과 집단주의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에 유효하다. 먼저, 사회와 집단이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개별 주체들 사이에 사회적 결속(연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연대가 궁극적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조직의 존재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 사회적 연대는 법제도, 관습이나 관행, 도덕률 등 사회적 규율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사회적 규율들의 성쇠와 대체 전환의 흐름을 살펴보면 사회적 연대감이 어떠한 방향으로 실현될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연대의 유형은 노동관계의 특성에 따라 변할 수 있을지라도 사회를 구성하는 본질적 기능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연대의 개념을 통해 개인적 이익 극대화에 몰입해 있는 경제적 교환이나 계약 행위를 사회적 영역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테면 경제 주체들의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관계를 사회적으로 조절해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약육강식의 자연 질서나 적자생존의 사회적 선별 과정보다는 개인과 사회가 상생하는 사회적 합의의 논리로서 노동의 갈등적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사회적 연대의 논지는 개인적 가치와 집단적 가치를 화합시키고자 한다. 뒤르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연대의 기능은 경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노동문화

이러한 사회적 연대 개념으로 임노동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임금의 형평성 판단에 적용해 보자. 임금의 형평성은 집단적(사회적) 연대관계의 함수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개인적 기대(또는 요구)와 집단적 기대(또는 요구)가 동일시되는 과정이 이뤄질 때 연대감이 형성되고 형평성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노동의 개인적 특성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이 사실은 집단적 연대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만 보면, 피용자가 현행 임금체계를 불공평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조절하기 위해 노동강도나 시간을 조정하여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연대의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조직 내부의 사회경제적 불협화 요소들을 감소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개인적 기대와 집단적 기대의 조화를 추구할 것이다. 노동과정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더라도 피용자는 소속된 조직과의 일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나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노동관계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는 것이 집단적 연대에 의한 조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상이한 피용자 집단들이 공평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집단적 의식을 갖도록 하는 노동문화는 협력적 노동과정에서 강한 긍정적 유인력이 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집단주의적 노동문화가 지나치게 내부적 연대감 강화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연대감은 조직 내부와 외부 사회로 확산될 경우에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뒤르캥의 관심은 이합집산이 되기 쉽고 배타적인 이기주의자로 전락하기 쉬운 개인들이 유기적으로 연대됨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조절장치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개인이 효용 극대화의 논리로 집단(사회)를 지배하는 경우나 사회가 집단적 논리에 의해 개인을 억누르는 경우나, 모두 기형적 사회임을 재발견하게 된다. [11]